

-최종강의-

"동아시아 인권의 탐구"

2011년 1월 19일 리츠메이칸대학 명학관 81호

본 강의의 목적은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논의가 역사 ·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 동아시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 인권의 개념이 어떻게 수용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생각하고 동아시아에서 인권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이번 학기의 강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먼저 내 자신의 인생에서 인권이 어떻게 관련되어 왔고 의식되어 왔는지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동아시아 인권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명과 야만,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식민지지배 책임과 더반 선언을 주된 논점으로 하여 논하겠다.

I. 나의 인생과 인권

1. 전쟁과 식민지지배

나의 조부모는 한반도 중부에서 1928년에 교토로 이주해왔습니다. 1910년의 한일병합 이후, 일본은 조선에서 여러 자원을 수탈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농촌지역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대지주의 토지 수탈이 진행되어, 조선인이 토지를 잃고 북으로는 만주로 남으로는 일본으로 내몰렸습니다.

나는 1945년 4월 3일 마침 오키나와에 미군이 상륙한 직후에 당시 슈우잔(周山)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케이호쿠쵸(京北町)에서 태어났습니다. 산 사이에 위치한 폐나 외진 곳으로 지금은 차를 타고 교토 시내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이지만 당시에는 포장도로도 없이 길이 험해서 가끔 버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나의 조부모는 처음 교토시의 토키와(常盤)에 살고 있었는데, 나의 부모님이 결혼한 직후 전쟁이 시작되어 조선인들도 징용소집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5남매의 맏아들이었고 조부모, 어머니, 나의 형, 합계 9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징용 당한다면 가족은 굽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즈마사(太秦)구 구장에게 호소하여 징용유예를 받아 슈우잔에서 농사를 지으며 공출미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한 정보(1町步, 3000평)라고 하면 보통의 백성이 가진 땅의 두 배 정도의 면적입니다. 수확한 쌀은 전부 나라에 바치고 뒷갈이한 보리는 전부 지주에게 지대로 빼앗겼습니다. 정미하면서 떨어지는 쌀겨와 싸라기, 논두렁에 심었던 콩만이 우리 뜓이었고, 9인 가족은 초근 목피로 연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쟁이 심해지면서 징용유예가 취소되어 도주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에 어머니는 기아 상태로 젖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싸라기로 만든 미음과 볶은 콩을 입으로 씹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가 그것을 소화해 낼 리가 없어 설사를 하고 나무 가지처럼 말라서 비뚤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경이

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1945년 8월 15일에 아버지가 몰래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김을 매다가 패전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를 부여안고 논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기아 상태였던 가족의 생명의 위기가 떠난 것입니다. 눈앞의 거대한 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한 달 더 이어졌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2년 전에 할머니가 임신을 해서 한밤중에 복통으로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산파가 "애기가 거꾸로 섰다. 교토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해."라고 했기에 슈우잔에 딱 한 대 있던 트럭에 할머니를 실어서 출발했습니다. 슈우잔 들어가기 전에 있는 카사고개(笠峠)에 접어들었을 때 목탄차의 엔진이 고장 나서 사람들이 아무리 밀어도 트럭이 앞으로 나가지 않아 할머니는 날도 밝기 전에 짐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탄고 야마다무라(丹後 山田村)에 살고 있었을 때 당시 16살이었던 어머니의 사촌 형제도 정용되어 탄고야마다(丹後山田)역에서 전철수(轉轍手)를 하고 있었는데 비오는 밤에 미끄러져 레일에 발을 끼어 기차에 허벅다리를 잘리어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조선인이 전쟁터나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죽었습니다. 식민지지배는 가혹했습니다.

2. 재일조선인으로서

1945년 일본 패전 때 조선인은 일본에 24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80만 명 정도가 강제 연행되었지만, 실제로는 60%, 140만에서 160만 정도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은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 고모들도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슈우잔에서 교토의 묘신사(妙心寺) 옆에 있는 하나조노 콘뽀쿠쵸(花園 艮北町)로 이사를 갔고, 나는 오무로(御室) 소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에 나카교우(中京)로 옮겨 소, 중,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자신이 조선인임을 의식한 것은 유치원 때부터입니다. 나는 이웃 사람들이랑은 다르다는 의식입니다. 아버지 친구가 놀러 왔을 때나 부모님은 서로 조선말을 썼고, 주위 아이들과 싸우면 "쵸우센!!"이라고 욕을 들었으니, 일본인에게 조선인임을 배운 셈입니다.

소학교에 들어가니 반마다 4, 5명씩의 조선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급식비 라든지 교재비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 선생님께 불려 나가거나 숙제를 하지 않아 혼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람'이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분명했습니다. 말, 음식 등 일상생활 문화의 차이를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만,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은 주변의 일본인으로 하여금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일본인은 식민지지배의 역사를 잔재를 창산하지 못한 채 강한 우월감과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 1960년 4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반대하는 '4월 학생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의 시위에서 200명 남짓의 소, 중학생을 포함한 학생 및 청년이 죽었는데, 군대와 경찰의 총에도 굴하지 않고 반정부운동을 계속 펼쳐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때 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보면서 한국의 중학생들이 왜 총부리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시위를 하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그 때 마침 일본에서도 미일안보조약을 둘러싸고 역사상 최대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60

년대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속속 독립을 해나갔으며 ‘황금의 60년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 반대가 높아지고 국제평화운동이 진전되고, 세계적으로 학생운동이 풍미한 시대로, 나는 그러한 시대에 중학, 고교, 대학의 청춘시대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는 것이다 – 재일조선인과 나》, 사회평론사, 2008년 11월 참조)

3. 학생운동

1964년 내가 한국에 처음으로 갔을 때, 한일회담이 있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은 그 다음 해인 1965년에 맺어집니다. 일본은 패전하고 식민지지배를 포기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한국과 국교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조약상 식민지지배를 종결시키고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맺자는 것이 한일기본조약의 성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업권이나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도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과 한국의 경제, 군사관계를 열었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미일안보조약과 한미상호군사협정은 있었지만, 일본은 헌법 9조가 있고 자위대이기 때문에 한국과 직접 군사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이 미국으로서는 불편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청룡, 맹호의 두 개 사단 등 5, 6만 명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당시 미군정 하에 있었던 오키나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은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의 병참기지로서, 오키나와에서 날아간 B52중 폭격기가 베트남을 폭격하거나 군함이 일본에서 물이나 식료를 보급하고 군인들을 휴식시키는 등 후방기지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군사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던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한일조약은 맺어졌습니다.

한일조약은 일본에 있어서는, 식민지지배를 법적으로 종결시켜 한국에 다시 경제 진출하는 기회를 얻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서 돈을 끌어내어 군사정권의 정치자금이나 경제개발의 자금으로 하는 의미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도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큰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에서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은 채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의 ‘1910년의 한일합병 조약은 이제는 무효이다’라는 표현으로 애매한 타결을 지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문언을 둘러싸고 일본은 한국병합은 예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을 독립국으로서 인정한 1965년에서야 비로소 무효가 되었다는 해석인데 반해, 한국은 한국병합은 무력에 의한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애매한 표현으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 양자의 견해의 차이를 그대로 놔 둔 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합계5억 달러로, 청구권이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않고 국교 회복의 축하금조의 경제 원조로 얼버무리고 조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애매한 타결이 오늘까지 역사 인식 문제에 화근을 남긴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당시,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군사동맹이라는 일본 헌법 9조 위반이라는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하는 비판이며, 또 하나는 일본 노조의 반대였습니다. 국교 정상화가 될 경우, 한국의 쓴 노동력이 유입되어 일본 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의 반대론은 남북분단을 고정화시킨다는 이유였는데, 식민지지배의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한국에 간 1964년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곧 시위가 시작되어, 6월3일에 정부는 위수령을 포고하고 진압했습니다. 위수령은 지역을 한정한 계엄령으로, 헌법을 일시정지하고 군이 사법·행정·치안권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포고에 반했을 경우는 군사

재판에 회부되며, 시내 중요한 지점에 전차를 배치하고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에 학생들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최루탄을 뒤집어쓰고 매우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 갔는데, 학교 안에서는 3천 명 가까운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교문에서 시내로 밀고나가려고 하고 있었고 경찰기동대가 최루가스를 뿜어내는 폐퍼포그 차량까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교문 밖에서 최루탄 직격탄을 맞아 피투성이의 얼굴을 한 학생이 학우들의 어깨에 떠메고 교문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학생들은 피투성이가 된 학우의 치료를 하지도 않고 시위대의 최선두에 떠메고서 다시 나가려고 교문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군대가 전차를 앞세워 고대 교문을 뚫고 진입해서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른바 '8·29학원난입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나 군대가 학교를 점령하는 상황에서,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한국의 학생들은 매우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대단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만, 나는 일본 안에서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든 한국에서 배워서 한국의 학생들의 괴로움이나 일의 한 뜻이라도 짊어질 수 있었으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생 때 재일동포의 '고교생 모임'을 조직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운동을 하긴 했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한국 학생동맹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뛰어들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학생운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여름에 당시의 이동원 한국 외무장관에 대해 '굴욕외교반대'의 시위를 했고 외국인등록증 미소지로 연행되었습니다. 츠키노와(月ノ輪)서 형사실에서 식민지 시대에 평양에서 형사를 한 외사과의 형사에게 "멍텅구리가 뭔지 아냐? 흠, 조선말도 모르나?"라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일제의 형사가 그대로 공안이나 외사경찰에 해방 후에도 그대로 눌러 앉아 재일동포나 한국에서 온 난민을 탄압하는 생상처인 역사의 절단면을 나는 보았습니다.

4. 한국으로의 유학

1968년에 한국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말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일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김치를 먹고 불고기를 먹기는 하지만 우리말도 역사도 문화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누군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가능하다면 저 학생들의 큰 짐 중 한 뜻이라도 나눠지고 학생들의 깊은 고뇌나 고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는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분단이 굳어지고, 남북이 적대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반공, 독재정권이 태어났고, 법적인 절차 없이 국가폭력에 의해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학살당하거나 투옥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학살된 민간인만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후 군부가 터무니없는 군사예산, 군비를 가지고 군사문화(militarism)가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냉전에 의해 찢겨진 민족의 크나큰 고통을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학을 갓 졸업한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 고민, 희망, 소원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수료하고, 조수가 되려던 1971년 4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용의로 육군보안사령부에 체포되었습니다. 반년후인 10월 22일에 제1심 판결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졌고, 1972년 12월 7일 제2심에서 무기징역이 되고, 상고 기각이 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1988년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1990년 2월 18일에 19년의 옥중생활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5. 투옥과 석방 후

내가 육군보안사령부에 체포된 경위나 옥중체험에 대해서는 『서승의 옥중19년』(역사비평사, 1999년)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무서운 고문이나 사상전향 공작을 경험했고, 사형집행 현장도 목격했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열악한 독방생활을 하는 가운데 적나라한 국가폭력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그 한편으로 정치범에 대한 세계적인 석방운동에 지지를 받음으로써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인권’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출옥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며 나에게 성가셨던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나가 주기를 바랬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는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강연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의 석방운동은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세계적으로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인권단체 등이 지원을 했었고, 앰네스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석방운동에 관련된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내가 석방된 1990년 가을, 약 한 달에 걸쳐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뉴욕, 워싱턴D.C. 등을 돌았습니다. 그 무렵 베클리의 초청을 받아 91년에 객원연구원으로서 샌프란시스코에 건너가 대규모 걸프전쟁 반대시위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베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미국 각지나 유럽 등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유럽을 투어하고, 중남미나 캐나다로부터도 초청을 받아 국제인권운동의 실제를 접하고, 베클리에서 한국에서의 고문금지운동(Stop Torture in Korea)라는 NPO를 세워 인권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6. 국제 심포지엄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 테러리즘>

미국에서 일본에 돌아와서 1994년에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대만에서는 타이베이에서 강연회를 마치고 구 정치범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 터, 정치범 사형장이던 마장정(馬場町), 육장리 시립 공동묘지(六張犁公墓) 등 정치범들의 수난의 현장을 돌아 적나라한 동아시아 국가

폭력의 정체를 목격했습니다. 대만에서 시작하여 오키나와로, 제주로, 연변으로, 나의 동아시아 국가폭력의 현장을 찾는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수난자’를 연결시키는 동시대성, 역사성을 밝히고 그 역압의 정체를 드러내며 그것을 없애는 일을 스스로의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즉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식민지, 냉전•분단체제에 지배 당해왔던 동아시아의 민중이란 누구인가를 탐구하여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전쟁과 침략, 국가테러리즘으로 점철된 ‘미일 중심의 지역지배질서’를 ‘민중중심의 지역질서’로 전환시키고 이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길을 모색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 – 한국, 대만, 오키나와를 돌아서》, 카모카와출판, 2011년 2월- 한국에서는 창비 2011년 6월 간행 예정 참조)

내가 출옥한 이후 동아시아의 평화, 인권, 국가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내 운명을 결정지은 한반도의 분단이 일본의 침략•식민지지배, 패전의 방식, 냉전시대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식민지지배, 분단의 운명은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를 무대로 일어난 사상이며, 우리민족의 근현대사는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의 일부이고, 우리나라의 통일은 동아시아 역사의 전환과 불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패전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민족해방이 냉전의 시작에 의해 압살되고, 대만 50년대 백색 테러리즘, 제주 4.3사건, 여수•순천학살사건 등의 국가테러리즘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냉전구조의 해체와 과거청산, 동아시아민중의 참된 해방을 향하여 일본, 한국, 대만, 오키나와의 수난자, 연구자, 활동가의 삼자가 결합하고, 증언, 답사, 연구의 삼부로 구성된 순수한 민간 국제심포지엄운동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이 구상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2•28사건’ 50주년의 타이페이를 시작으로서 제주4.3사건 50주년을 계기로 제주(1998년), 오키나와(1998년), 광주사건 20주년의 광주(2000), 교토(2002년 2월), 한국의 여수(2002년 10월)로 6번에 걸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 성과의 일부로서 한국, 대만에서 국가폭력사건의 진상규명•명예회복•보상법이 실현되었습니다. 나는 그 운동을 제안하고 조직하여 실행해왔습니다.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 – 일미 중심의 지역질서의 폐절을 향하여》, 오챠노미즈서방, 2004년 참조)

그 후, 아시아주의, 대동아공영권 등 아시아의 이름을 머리에 둔 메이지 이후의 일본중심의 지역 해계모니를 뒤엎는 것이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협동과 평화로의 길이며, 민족해방운동(탈식민지)의 완성이라는 관점에 서서 2005년경부터 동아시아공동의 야스쿠니반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즉, 천황제 일본 군국주의의 전쟁을 친미하며 황군병사로 동원 · 전사한 조선 사람 · 대만 사람을 죽은 후에도 황군병사로서 계속 행진시키고 있는 야스쿠니에 대한 반대투쟁을 정교분리 재판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인식, 역사청산의 운동으로서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사람 · 대만 사람의 강제합사 취하를 청구하고, 야스쿠니행동을 평화적 생존권의 문제, 인격권(자기결정권), 사상·신조의 자유 문제

로서 싸우는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의 어둠으로’ 캔들행동(이하 야스쿠니행동)을 2006년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7. 한국병합 100년과 ‘동아시아 역사 · 인권 · 평화선언’

작년은 ‘한국병합’ 100년이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에서 크게 다루어지며 여러 단체로부터 성명이나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성명이나 운동의 기본적인 태도는 ① 근대 이후 일본은 조선을 침략했다. ② ‘한일병합’은 불의 부당하며, 병합조약은 위법이다. ③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은 병합조약과 식민지지배의 평가를 애매하게 했다. ④ 북한과의 식민지지배 청산을 위한 북일평양선언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 ⑤ 한국병합 100년을 기하여 일본 측리는 병합조약의 불법 · 무효를 선언하고 사죄하여, 과거청산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래의 ‘한국병합’ 논의는 주로 병합과 병합조약의 불법성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적법론에서 부당론 · 합법론으로 옮겨 온 반면, 한국측은 부당 · 불법론입니다. 즉, 한국측은 ‘한국병합’은 협박과 강제에 의한 것이었고 부당한데다가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법 자체가 ‘늑대의 법’으로서 부정되어야 하고, 조약문서의 하자, 황제의 날인·비준 수속의 결여로 인해 조약이 당시의 국제법에 비춰봐도 불법이라는 2단계의 부정 논의입니다.

하지만 ‘병합’ 100년의 논의는 자칫하면 병합조약의 적법·불법의 논의로 왜소화될 수가 있고, 제국주의 시대의 법도 절차적인 면에서 적법성이 있다면 ‘합법적이다’는 논리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민중을 노예화하고 차별하는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의 법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대만은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에 의해서 ‘적법’하게 일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만, 봉건지배자들의 거래에 의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민중들이 팔려 간 것뿐으로 민중들은 관여한 바 없었습니다. 국민주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배자가 자의적으로 체결한 조약 자체의 유효성을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병합100년의 논의는 일본의 조선 지배의 역사적 위상을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은 강화도사건(1875년)부터 시작해서 식민지지배는 실질적으로는 1905년 노일전쟁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병합 100년이 식민지지배 자체의 부정이라는 보편성 위에 평가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병합’은 한일간의 민족갈등으로 왜소화되어서는 안 되며, 메이지 이후 홋카이도(北海道), 오키나와, 대만에 대한 일본의 침략·지배의 연속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한국병합 100년을 더 큰 세계사적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반인종주의, 차별철폐 세계회의’가 개최되어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 (이하 더반선언)이 선포되었다. 서구 제국의 노예제 · 식민지지배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임(Crime against Humanity)l 천명되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배했

던 이 4, 500년의 세계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고 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반에서는 근대를 서구 ‘문명’의 ‘야만’에 대한 지배의 역사로 파악하고 그 지배가 차별과 편견을 정당화하고, 노예제와 식민지 지배라는 야만적인 행위를 초래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더반선언은 현대의 지배와 차별의 근원을 고발했으며, 21세기 최대의 국제인권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까닭에 노예제가 논의의 중심으로 식민지지배 문제는 수백 항목 속에서 단 2항목에서만 언급되었습니다.

나는 이에 축발되어, 한일병합 100년을 계기로 서구의 침략, 전쟁, 식민지지배가 1세기 반에 걸쳐서 동아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 재발 방지라는 ‘과거 청산’이 성실하게 이뤄지는 것이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동아시아 협동에 불가결한 전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민들에 의한 ‘더반선언’의 동아시아판을 만들어 일본의 식민지지배 책임을 보다 보편적인 입장에 서서 장기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동아시아 역사 · 인권 · 평화선언’을 세계사와 동아시아 근현대사 속에 자리매김하여, 보편적 문제로 제기하여 ‘선언’을 준(準) UN문서로 자리매김하여,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논의 등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참조해야만 하는 문서로 위상을 따져 나갈 예정입니다. 각 분야에서의 현황과 과제를 집약해서 행동계획을 완성시켜, 2011년 9월 더반선언 1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선언’의 보고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II. 동아시아에서의 인권의 탐구

1. 인권은 보편적인가?

애당초 ‘인권’은, 전제지배를 뒤엎고 권력을 장악한 인민이 사회계약이란 핵심에 의해서 근대국민국가에서의 주권자로서 ‘개인’을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방어하고 공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보증장치로서 고안된 것이며, 오랫동안 국가주권 하에 국민(시민)으로서 보호 받을 권리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구미 남성 유산자(有產者)의 특수한 권리로서 오랫동안 그 외의 무산자, 여성, 식민지 피지배자 등이 ‘사람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를 향유하는 데에서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고 천명한 바와 같이, 인권이 초월적인 자연법 사상에 기초하여 ‘사람’ 일반의 천부의 보편적인 권리로 주장된 이상, 인권은 특수성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배제하는 ‘해방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인권은 처음에는 국민국가 내의 차별에 대해서, 다음으로 국가·집단 간의 차별에 대해서, 나아가 국가의 벽을 넘어선 사람 일반의 보편적 권리로서 끊임없이 그 권리의 실현을 주장하고 권리의 지평선을 확대해야하는 사명을 띠고 탄생한 것이다.

애당초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 이후 ‘인권의 보편성’이란 주장은 현실에는 인권이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나타난 것임으로, 선언적이며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니, 역사 속에서 현재까지 아직 인권이 보편적인 적은 없었다. 특히 서구세계에서 형성된 근대법은 밖으로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원적 세계관을 전제로 한 ‘폭력으로서의 국제법’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극히 비(非)보편적이며 특수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문명’의 사명을 간판으로 ‘야만’을 침략·지배함을 서슴치 않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긴 침략과 식민지지배의 시대를 거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동아시아 민족들은 형식적 독립을 획득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나 인권이 확립되기에 이르지 않았다. 게다가 동아시아는 냉전의 벽에 의해서 분단되어, 동서 양쪽 진영 모두 자신의 진영의 세계전략에서의 이익 추구에 최대의 관심을 두고, 민주주의나 인권 등은 이데올로기적 선전·선동으로 주장되었음에 불과했다. 미국은 사회주의권 비동맹국가에 대해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의 결여를 비판하고 직접적인 ‘체제변환(regime change)’에까지 착수했지만 자신의 진영 내의 독재, 인권억압, 대량학살에는 관용했을 뿐만 아니라 조장마저 해왔다.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인권론은 계급혁명을 통한 궁극적인 인간해방을 내세웠지만, 계급독재론에 기초하고 있었음으로 원래부터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없었다.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는 ‘반공’의 대의를 구실로, 미국과 해당 국가들의 독재정권이 민

간인 학살이나 인권침해를 상시화 시켜왔다. 동아시아에서 인권이 사회적으로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점차 민주화 과정이 태동한 1970년대 이후였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현한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전후 헌법 개정과 함께 국민 주권이 명기되어 ‘신민(臣民)’에서 ‘국민(國民)’으로의 이행에 따라 ‘인권’이 의식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개념은 피상적 수준에 그쳤으며, 공권력의 폭력과의 치열한 대항이라는 인권의 본질적 성격의 깊이에까지 다다르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일본인민은 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예속적인 ‘신민’이었고, 전후에도 일본국 헌법 제1조에 국민은 ‘주권자’로서 규정되고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가 헌법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중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제1장을 ‘천황’의 규정이 차지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전과 전후의 단절이 명확하게 지어지지 않았고, 일본국민은 근대적 ‘개인’으로서 스스로의 주체를 확립하지 못한 데에 그 불완전함이 기인하고 있다. 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를 해체하고 다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평화와 민주주의’를 기본적 성격으로 하는 일본국 헌법의 개정을 제촉했지만 그 헌법은 일본인 스스로가 주권자이고자 해서 피를 흘려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권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권의 보편적, 해방적 성격이 줄기차게 인권 개념의 내용을 확충, 확대해왔다고는 해도, ‘인권의 보편성’은 ‘문명’이라는 서구의 세계지배구조 위에서 구축된 비(非) 보편적 개념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근현대사 맥락에서 보면, 전쟁, 침략, 식민지지배, 대량학살이라는 적나라한 국가폭력이 지배해 온 곳이라서 생명권, (평화적)생존권, 신체 안전과 같은 기초적인 권리(Basic Rights)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였으며, 일본 내 조선인 차별과 같은 일상의 차별조차 그 원인이 ‘문명’과 ‘야만’의 이원적 세계관을 전제로 당연시 되었던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기인함을 똑바로 보지 않고서는 인민이 보편적 인권을 지배자, 억압자의 손에서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문명과 야만

베스트팔렌 평화조약(1648년) 이후, 주권국가체제의 성립은 국가의 독립·평등과 내정불간섭의 논리에 의해서 유럽 중세세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국제관계’를 만들어내고, 독립·평등한 주권자로서 국민이 주체가 되는 근대 시민사회로의 길을 열었다. 단, 독립한 주권은 서구 ‘문명’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정된 국가에게만 향유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였고, ‘야만’ 및 ‘미개’(야만으로 한데 묶겠다)에서는 향유되지 못한 권리였다. 따라서 그곳에는 당연히 보편적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야만’에게 인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문명은 야만을 ‘문명화’하는 사명을 가진 것으로, 오히려 서구의 ‘야만’적인 세계에 대한 침략, 지배, 교화가 의무로 인식되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그 시대에서 가장 선진적인 과

학, 기술, 인문의 정화(精華)의 종합으로서 인식되어 있지만, 문명이 야만에 대한 침략, 지배, 착취를 발판으로 번영한 것이라면 그런 문명 자체가 본질적으로 야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989년 파리에서 있었던 ‘프랑스 인권선언’ 200주년 기념의 기념 심포지엄에서 어느 아프리카 대표는 ‘200년간, 프랑스 인권선언은 지중해를 건너 온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서구사회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개념을 획득한 후에도 보편적 인권은 문명의 벽을 넘지 않았고, 문명을 전도하고 교화를 해도 인권은 보편화되지 않았다.

문명론이 서구 문명의 초월성을 비판하고, 여러 문명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선 후에도,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보이듯 서구문명의 우월성이 주장되고 문명론이 제국주의의 지배논리라는 인식이 공유되게 된 오늘날에도 판타나모, 아부 그라이브에서의 잔학 행위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내걸고 자행되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의거해서 ‘테러리스트’나 ‘불량 국가’를 비난하면서 그곳에서는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원적 세계관이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문명의 이름으로 침략과 지배, 인권침해가 오늘날에도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코우키 《폭력으로서의 국제법을 넘어서》, 2010년 참조)

서구는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향유하면서 비 서구 세계에 대해서는 서구적 기준에 따른 ‘보편적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세계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비 서구 세계는 보편적 인권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1994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제기된 ‘아시아적 인권론’의 논의가 있다. 그곳에서 인권의 역사적 단계론이나 문화론을 주장하는 ‘아시아적 인권론’은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서양 국가로부터 맹렬히 비난을 받았다. 물론 사회주의나 유교문화주의, 집단주의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적인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폐식민지, 폐침략의 역사에 대한 민족주권론적인 비판은 본질적인 ‘보편적’ 인권론 비판이라고 하기보다 정권옹호의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다만, 구미제국에서 제기된 동아시아 인권 비판도 순수하게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화평연변(和平演變)(regime change)을 위한 프로파간다의 색채가 놓후했다.

3. 동아시아란?

동아시아란 단순히 세계지도에 그려진 지리적 구분이 아니다. 루쉰은 ‘사람이 걸어서 길이 생긴다’고 했다. 근대 이후, 500여 년간 구미 열강의 침략과 지배의 발자취를 따라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가 만들어져 왔다. 원래 아시아는 단순히 그리스 건너편에서 지중해 동쪽 해안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서구 세계의 확장과 더불어 근동, 중동, 극

동으로 그 개념을 넓혀서, 태평양의 끝 조선, 일본까지 서구가 지배하는 ‘아시아’라는 판도가 완성되었다. 아시아는 근대 이후, 세계질서의 중심을 차지한 서구가 만들어낸 역사·정치적 지역질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이후, 그 억압적인 서구에 맞서 자주·독립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은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하나는 동아시아 민족과 연대해서 서구 백인제국에 대항하는 ‘아시아주의’의 길이었고, 또 하나의 길은 서구 제국주의를 모방하여 동아시아 민족을 억압하는 ‘구화주의(歐化主義)’의 길이었다. 그곳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악우(惡友)’들과 결별하고 동아시아 민족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밀천으로서 서구 신사 제군과 어깨를 나란히 ‘문명’ 사회의 반열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즉 ‘문명개화’의 가치를 내걸고 철저하게 서구를 모방하여 그 폭력에 있어서 서구에게 야만스러운 ‘문명국’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썼다. 메이지 시대의 최대 외교적 비원이었던 ‘조약 개정’은 러시아와의 대항을 세계전략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영국에 영합하고, 한반도의 지배권을 둘러싼 청일·노일전쟁에서의 승리를 거두어서 ‘실력’을 보임으로써 ‘문명’국으로서 대우 받게 되었으며, 일본은 동아시아의 소제국(小帝國)으로 우뚝 섰다.

얄궂게도 아시아를 침략·지배함으로써 일본은 서구 태생의 ‘아시아’를 일본 중심의 지역질서 개념으로 환골탈태시켜버렸다. 서구의 시선으로 본 ‘아시아’ 개념에 일본이라는 굴절 렌즈를 끼워 넣어, 외래품을 모방하여 일본제품으로 만들어내듯 독특한 일본 버전의 아시아를 만들어낸 것이다. ‘아시아란 일본이다’라고 코쿠분 료세이(國麿渣◆)씨는 말하고 있다. 일본은 전근대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華夷秩序)를 일본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 ‘아시아’를 변조했다. 일본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일본주의’로 말하는 대신에 ‘아시아주의’라고 했다. 그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의 소제국으로서 대일본제국 건설의 야심을 아시아, 동아, 대동아의 이름 하에서 도회(韜晦)하며 지역 지배를 넓혀 왔다. ‘대동아공영권’, ‘대동아성전’은 일본의 ‘아시아주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4. 냉전과 국가테러리즘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은 일본 군국주의의 해체, 식민지지배체제 청산 (동아시아의 탈식민지)의 과정은 냉전의 시작으로 중단되어 동아시아 각 지역의 지배 질서는 미국 지배 하에 재편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보좌하여, 구 식민지지배의 협력자(친일파)들과의 관계를 재생해서 미국의 거대한 폭력의 후광을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대부분에 그 영향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민중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다.

냉전이란 미국과 소련의 양 체제가 전(全) 지구적으로 블록을 형성하여 정치·군사적인 면 뿐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냉전은 동아시아의 탈(脫)식민지화 과정을 동결시켜버렸다. 즉 아편전쟁 이후, 동아

시아 민중의 최대 염원이었던 민족해방 과제는 좌절된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략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해체는 불충분하게 중절되었으며, 군국주의의 주요세력은 미국의 조력자로서 온전히 부활되어 폭발적인 동아시아 민족해방의 에너지를 억압했다. 그 결과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에 격심한 갈등을 야기하여 민간인 대량 학살을 초래했다.

냉전의 최전선이 된 동아시아에서는 분단의 벽이 한반도, 대만해협, 베트남을 가로질렀고, 군부 독재 하에서 계엄령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고 극단적인 국가폭력이 난무했다. 한반도에서는 조선전쟁을 사이에 두고 반세기 가까이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되었고, 중국과의 내전을 거쳐 장개석 정권이 대만을 도주하여 37년간에 이르는 계엄령 통치를 했다. 베트남은 40년 간의 전란(戰亂)을 경험했다.

그 중에서 한국에 대한 미군지배와 분단·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제주 4·3사건에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에 의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저질러졌고, 그 희생자는 10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만에서는 1946년의 ‘228사건’부터 ‘50년대 백색 테러’까지 학살사건에서 수 만 명의 민중이 살해되었다. 이들 희생자는 ‘폭도’, ‘반란분자’, ‘통비분자’, ‘빨갱이’ 등으로 불리며, 반역자, 범죄자로서 오랫동안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였다.

1980년대에 대만·한국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드디어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는 반독재정권의 중심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1989년 냉전의 붕괴가 투쟁에 큰 추진력을 주어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학살사건의 명예회복·배상운동이 전면으로 부상했다. 한국에서는 1996년에 고창 민간인 학살사건 배상법이 성립했는데, 광주학살사건의 명예회복·배상이 냉전·분단체제에 큰 돌파구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을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명예회복·배상법 제정은 미해결이지만,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1999년 12월 제정되었다. 동시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성립되었다. 대만에서는 1995년에 ‘228사건’에 대한 배상법이 성립하였고 1998년에 ‘계엄시기 반란 및 비첩부당심판(50년대 백색 테러)안건 보상 조례’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과거청산의 진행, 즉 ‘지연된 정의(delayed justice)’의 실현인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본의 과거청산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역사인식, 교과서문제, 일본군위안부, 야스쿠니강제합사, 강제연행, 관동대지진에서의 조선인학살 등의 문제는 모두 여기에 기인한다.

5. 동아시아에서의 식민지지배 책임이야말로 21세기 최대의 인권문제 과제

200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 (이하 더반선언)이 채택되었고, 서구 제국의 노예제·식민지지배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임을 천명했

다. 서구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변모하여 세계를 지배했던 이 4, 500년의 세계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더반에서는 근대를 서구 ‘문명’에 의한 ‘야만’에 대한 지배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그 지배가 차별과 편견을 낳고, 노예제와 식민지지배라는 야만적인 행위를 초래한 것을 지적했다. 서구 ‘문명’사회의 ‘평등’은 밖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야만’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 ‘문명’은 애당초 본질적으로 ‘야만’이었기 때문에 ‘문명개화’를 내걸고 서구를 추정해 온 일본이 역시 ‘야만’일 수밖에 없다.

더반선언은 현대의 지배와 차별의 근원을 고발하는 것으로 21세기 최대의 인권 과제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 개최된 까닭에 노예제가 논의의 중심으로 식민지지배 문제는 수백 항목 속에서 단 2항목에서 밖에 언급 되지 않았다.

나는 이에 자극을 받아, 한일병합 100년을 계기로 서구의 침략, 전쟁, 식민지지배가 1세기 반에 걸쳐서 동아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고, 사죄, 배상, 재발 방지라는 ‘과거청산’이 성실하게 이뤄지는 것이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동아시아 협동에 불가결한 전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민들에 의한 ‘더반선언’의 동아시아관을 만들어 일본의 식민지지배 책임을 더욱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09년 가을 마에다 아키라(前田朗)씨 등 몇몇 분들과 ‘동아시아 역사·인권·평화선언’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합병 100년을 한일의 ‘사죄와 용서’ 세레머니나 일과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세계사와 동아시아 근현대사 속에 자리매김하여, 보편적인 문제로 제기하여 ‘선언’을 준(準) UN문서로 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논의 등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참조해야만 하는 문서로 할 예정이다. 작년 8월 22일(일본), 29일(한국)에서의 ‘한일 강제병합 100년 한일시민 공동선언대회’에서 제안했으며 동아시아 각 NGO에서 각 분야에서의 현황과 과제를 집약해서 행동계획을 완성시켜, 2011년 9월 더반선언 1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선언’의 보고집회를 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인권론의 인식과 역사적 과정을 바탕으로 하면 동아시아에서의 인권이란 명백히 서구의 ‘보편적 인권’과는 다른 것이다. 즉, 보편적 인권이라는 허위의식의 외투를 벗기고 진정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구(헤게모니 중심)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장악을 해제할 필요가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중심의 ‘아시아’라는 허위의식이 해제되어 지역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대한 과제는 서구 ·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지배 책임을 물어, 탈식민지의 과제를 달성함으로써 근대 이후 500년의 지배질서를 해체하고 진정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전쟁 이후 이어져 온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해서, 일본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과거의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규명 · 권리회복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민지지배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명확한 국제적 합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